

## 북·일 ‘스톡홀름 합의’ : 동북아 지각변동의 서막(序幕) - 평양의 출구전략과 아베의 야망 -

조 민 (연구본부장)

Online Series CO 14-07

### 재조사 합의, 흔들리는 동북아

북한과 일본 양측은 5월 29일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대한 합의를 전격 발표하였다. 일본은 납치피해자 재조사가 시작된 단계부터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하고 대북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일 ‘스톡홀름 합의’로 동북아 국제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조만간 납치 문제 재조사를 위한 평양-도쿄 간의 핫라인이 가동된다면 동북아 역학 구도의 지각 변동이 초래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쌍방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 측은 “1945년을 전후하여 공화국령 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 잔류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 피해자 및 행불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밝혔다.

북한과 일본은 스톡홀름 협상을 통해 국교정상화 추진, 특별조사위원회 3주 내 가동, (북한) 일본인 납북자 전면 재조사, (일본) 인적왕래, 대북송금, 선박입항규제 일부 해제 및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등에 합의하였다.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와 보상 차원의 경협, 그리고 수교협상 등의 내용을 담은 평양선언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납치 문제에 대한 ‘통 큰 인정’의 역풍으로 일본 국민의 반북 감정이 악화되면서 평양선언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후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일관계 개선 지시에 따라 북한은 후쿠다(福田康夫) 정권과 납치 문제 재조사 시행에 합의하였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2002년 9월 당시 납치 피해자 5명이 일본으로 돌아왔고,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의 2차 방북을 계기로 이미 귀국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돌아왔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가 모두 17명이라며 나머지 12명의 송환을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12명 중 요코다 메구미(横田 めぐみ) 씨를 비롯해 8명이 이미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는데, 북한이 재조사를 통해 과연 일본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북·일 관계 진전의 관건이 될 것이다.

금번의 재조사 합의는 2008년의 ‘납치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로 한정되었던 재조사 범위를 넘어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 피해자,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으로 크게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납치 피해자’ 신원 확인 문제가 진실게임 양태를 띠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힐 수 없었던 까닭에 재조사 시행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1945년 이후 …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로 확대됨으로써 풀기 어려웠던 현안이 다양한 재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었다. ‘물타기’로 현안에 대한 초점이 약간 흐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과 일본 양측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절묘한 묘수로 이해된다.

## 북한의 출구전략, 일본의 ‘역(逆)포위’ 전략

북한과 일본의 ‘주고받기 식’ 합의는 양측의 전략적 목표의 ‘빅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사일·핵 도발로 스스로 자초한 국제적 대북 포위망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일본 또한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에 맞닥뜨린 도전적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

북한은 핵보유 인정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왔으나, 현재로서는 미국이 북·미 합의의 ‘문턱(2·29 합의+α)’을 낮출 의도는 없어 보인다. 오바마(Barack Obama) 정부의 북핵 해결의 의지와 역량에 대해 확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전략적 무대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더욱이 북한은 한국을 대북 포위망을 뚫는 출구로 기대했으나 점차 북한에게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중국은 이번 계제에 ‘북한 길들이기’를 확실히 하겠다는 심산이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평양을 외면하고 서울을 먼저 찾는 데서도 중국의 전략적 타산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포위망을 뚫고 나와야 하는 출구

전략과 더불어 일본의 독자적 제재 해제와 경제지원을 얻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 대일(對日) 관계개선은 그야말로 사활적 카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 포위압박 전략인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장악 의지,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동해 진출에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 열도가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있는 현실도 안보 우려를 한층 자극한다. 이에 납치 문제를 둘러싼 국내정치보다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 내 ‘선(先) 납치 문제, 후(後) 북·일 수교’ 원칙이 바뀌었다. 아베(安倍眞三) 제2기 정권에서는 납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사실과 중국과의 영토 문제 갈등으로 대중 위기감이 바짝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안보전략이 요구되었다. 이에 아베는 미·일 동맹의 강화와 함께 ‘집단지 자위권’을 내세웠고, 이는 한국의 거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 위협 아래 놓인 안보 상황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납치 문제 조사 합의가 보다 본질적인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일본은 미·일 동맹의 핵심인 ‘확장억지’에 일본 안보를 전적으로 내맡길 수 없다고 여긴다. 그렇다고 미·일 동맹을 깨는 핵개발을 추진할 입장도 전혀 아니다. 여기서 일본은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또한 북한의 핵위험으로부터 독자적인 전략을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대북억지를 위한 한·미동맹은 거부하지 않지만, 한·미·일 삼각동맹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을 삼각동맹 구도의 3자협력에서 떼어내어 중국 측에 가까이 붙잡아 두기 위해 평양보다 서울을 우선시하는 친한(親韓)정책을 과시하고 있다. 올해 초 중국 하얼빈역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 등 한·중 간 경제 및 역사 문제에서 양국 간의 연대 강화로 일본은 내심 불쾌한 심정이다.

그동안 6자회담을 주선해온 중국이 회담 재개를 주장해왔는데 비해, 일본은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탐탁찮게 여기면서도 불만을 감춰왔다. 사실 ‘9·19 공동성명’에 나타났듯이 일본은 부차적인 지위에 불과하며 대북 지원 역할에 한정된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다 최근 중·일 관계가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긴장관계로 치닫게 되자 중국 주도의 역내 안보대화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과시했지만, 일본은 3국 공조체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다.

물론 일본은 이러한 근본적인 방침 및 새로운 대북전략의 구상과 접근 방식에 대해 미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미국의 충분한 이해와 양해 없이는 추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북·일 간 여러 차례의 비밀협상에 대해 ‘미국도 몰랐다’고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다.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바마는 아베가 가고자 하는 길을 굳이 막을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미국이 바라는 바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심전심(以心傳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일본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삼국동맹의 하위 변수로 전략적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남북협력도 차단되고 있는 호기를 놓치지 않고, 대북 포위망 출구 제시와 경제지원 카드로 북한을 끌어들이며 대중·대러 ‘역(逆)포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 아베, 원산에 핀을 꽂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략으로 북한을 끌어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본식 ‘이이제이(以夷制夷)’인 셈이다. 당장 북핵의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이는 미국이 적극 기대하는 바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청진과 나진·선봉을 장기간 조차하여 동해를 장악하고 일본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아베는 대륙세력에 대한 ‘역(逆)포위’를 위해 한반도 지도 어디쯤에 핀을 꽂을까? 원산이다.

북한의 화물여객선 망경봉호는 원산과 니이가타(新潟)를 왕래한다. 이제 곧 재취항하게 된다. 재일본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앞으로 설치될 평양의 남북 재조사 실무협의 사무소가 개설되면 북·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형태의 반(半)공식적인 양국 간 외교채널이 구축된다.

아베는 원산을 중국과 러시아의 대일 압박을 상쇄시키는 대북 진출의 교두보로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핵실험 유혹을 적절히 통제·관리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띄웠다.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북·일 합의로 나타날 동북아 질서의 지각변동에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KINU 201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